상간상되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出州中生之村	배포일자	2021년 0월 1일(수)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특별사법경찰과	담당자	• 환경수사팀장 • 식품위생수사 • 담당자 • 담당자	팀장 박미애 ( 김장용 (	<b>☎</b> 440-3371 <b>☎</b> 440-3381 <b>☎</b> 440-3376 <b>☎</b> 440-3383
사진	□ 없	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9월 6일부터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나서

- 제수용품, 선물용품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
-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10,082개소 대상 -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위장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농업·수산 관련부서, 군·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10,0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은 추석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점포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 명태, 병어, 고사리, 도라지, 곶감, 밤 등 추석 제수용품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우, 굴비, 과일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점점검 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미표시 하거나 위장판매 하는 행위, 주요 성수식품 불법 유통·판매 등도 함께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한 식재료 수입 급증 등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용품과 주요 성수식품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며, 시민들께서도 농·수산물을 구매 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길바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